

도내 중기 저력 확인

우범기 정무부지사, 한스 방문 애로사항 청취·노고 격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2일 도내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날 우 부지사는 콘크리트VR관, 포장블록, 하수도관련 구조물 교량 및 토목구조물 등을 생산하고 있는 김제시 (유)한스의 사업 현장을 찾았다. (유)한스는 지난 50년간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도내 콘크리트제품 생산회사의 선두주자격인 (주)신콘크리트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이근호 한스 대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집중호우와 빠른 표면배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집수정을 활용한 빗물처리보다 3배 이상 향상된 자동전반 배수관을 개발했다”면서 “펌프장 맨홀 및 제수면 맨홀 한천 맨홀 등은 품질과 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2일 콘크리트VR관, 포장블록, 하수도관련 구조물 교량 및 토목구조물 등을 생산하고 있는 김제시 (유)한스의 사업 현장을 찾았다.

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고무링삼합VR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설비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1일 50여편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에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꺾임없이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를 넘어선 생활 속 갑질, 해결 방안은?

도의회 환복위·민주 도당 민생실천위, 생활 속 갑질 개선 토론회 법·제도 정비 통한 사전 예방, 피해 신고시스템 구축 등 제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기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김만기 의원)는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만기 의원은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각종 갑질이 도를 넘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연 의원은 “한법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두 해전 직장 내 괴

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고, 지난 5월 도의회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갑질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갑질 문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이명연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는 갑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갑질 관련 법·제도 정비 통한 사전 예방과 교육·홍보 강화,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최대 처벌 원칙 준수, 피해자 관리 지원, 갑질 대응 사례집과 제정했다.

또한 갑질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시 사치, 존중, 차이 인정을 지적하면서, 노르딕 국가에 갑질 문화가 없는 까닭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등 안테의 법칙이 국민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영정 운영실장(우아생활문화센터), 김남규 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영경형 담당관(전북도 인권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기는 민생실천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 등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기는 민생실천위원회는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도 자치경찰위, 출범 초기부터 ‘빠격’?

도의회 행자위 업무보고서 “의회에 해야 되는지 의문” 발언으로 문제가 시작돼

행자위원들 “의회와 소통 거부 유감 표명 모든 방법 강구할 것”

지난 7월 1일 주민친화적 자치경찰을 표방하며 공식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빠격’되고 있어 도의회와 도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이영규 위원장이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면서 “다만 법령에 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산사립이나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경청하고 답변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원들에게 보고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같은 자치경찰위원장의 발언에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김대중 의원은 “이영규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말씀하면서, 전북도는 시민참여형 자치경찰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 운영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 독립이 아니고, 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라며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어떻게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을 통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나 보고 없이 업무보고 회의장에서 사무국장에게 발언요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다”며 “자치경찰위원장의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3항에 의하면,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북도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풍성’

서운근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등 8건 본회의 통과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의 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해 각종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복리증진이 기대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의회는 이경신 의원과 송상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운근 의원의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은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녹색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위한 것으로 야호하고 기본 계획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구성돼 있다. 최용철 의원의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고,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남숙 의원의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승진 의원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종합 관광정책의 연계 측면에서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다. /김윤상 기자

이기동 의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 소득 증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치유관광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경신 의원의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 상황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정했다.

송상준 의원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 규모를 학교급별로 세분화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 때에는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두드러졌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남북간 적대관계 청산”

전주시의회, 축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22일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 모두가 합의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옥 의원이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국전쟁 관계국들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전주시의회가 22일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 모두가 합의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세계에 민연한 국가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전주형 미션투어 도입,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김동현 시의원

전주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션투어’ 도입 제안이 나왔다. 지역 대표 관광자에서 인증 과정을 수행하면 여행경비 일부나 특전을 주는 야간대, 체류형 관광자료의 변모가 궁극적 목표다.

22일 전주시의회 김동현(더불어민주당, 삼천1·2·3동) 의원은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형 미션투어를 도입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 코로나19로 수렁에 빠진 관광업계 전반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미션투어는 지역에 숙박·여행하면서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수행하면, 경비 중 일부나 기타 특전을 지원하는



관광 상품이다. 미션투어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다양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테마여행 10선을 중심으로도 활성화돼 있다. 또 전국의 각 지자체는 독자적으로나 인접한 지역과 연계한 상품을 내놓는 등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과 경주의 미션투어 체험 사례를 들며 “전주형 미션투어 개발·도입으로 관광 상품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재개발로 사라지는 마을, 삶의 흔적 지켜야”

최명철 시의원

재개발로 사라지는 도시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 삶의 흔적 등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주시의회 최명철(더불어민주당, 서신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마을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기에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동네를 기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전주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9곳이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10곳이다. 최 의원은 “이미 착공·분양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라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마을흔적 보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신동 갈나무골은 재개발로 인해 마을의 상징인 ‘도네기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난 3월 ‘주택재개발지역



기록화 사업 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지역 유산을 간직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을 통해 옛 마을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신동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따르면 서신동 비구벌 재개발구역인 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 상가는 양쪽 도로변이 가드레일에 갇힌 구조로 상가 기능을 상실, 1300여 세대 5000여 명의 주민이 물론 하나 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는 “3억원을 주고 분양 받은 상가는 1년 넘도록 재산권을 침해 받은 채 굳게 닫혀 있다”며 “무책임한 분양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농축산식품업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2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철수 위원장(장흥1)은 “도내에서 나오는 가족분노 뿐만 아니라, 타 도에서 배출되는 분노까지 수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축산폐수의 일별 배출량 등 처리량을 정확히 계산해 도내에서 나오는 분노만 적정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기능구축인의 안정적 정착환경 조성에 있어 최선의 조건은 귀농인의 생활비 마련이다”며 “이를 위해 단기간 내에 자급화전을 통해 수입으로 버틸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원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도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짧은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남원시평생학습관 분관에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름다운 선거 짧은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남원시평생학습관 김종단(82, 나 혼자 하는 선거)씨와 김현옥(64, 똑똑한 한 표)씨가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군산 우리배움터한글학교 김순애(70,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씨와 김순자(63, 어떻게 나랏일 할 사람을 아무나 짚나)씨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호상 기자

호남지역 39개 대학교수 518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전북지역 도내 교수를 포함한 호남 지역 39개 대학교수 518명은 오랜 논의 끝에 동학운동과 5.18민주화쟁쟁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임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지지선언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정치인임과 동시에, 기초과학, 첨단기술 및 시영역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지방 대학의 발전 및 대한민국의 기본교육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